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관식에 참석해 헌관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수처 공식 출범

헌관식 진행... 참석자들 서로 격려말 전해

추미애 법무장관 “김대중 정부 공약 마침표 찍어”

윤호중 법사위원장 “검찰 기소독점주의 허물어”

남기명 설립 준비단장 “국민 모두의 기관 되길 바래”

김진욱 처장 “인권친화적 선진 수사 전범 되도록 노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식 출범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일찍이 김대중 정부에서 공약한 것을 마침표 찍었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추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헌관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헌관식에는 추 장관을 포함, 김진욱 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이 참여했다.

추 장관은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하는 순간이 많았다”며 “드디어 출범을 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 감사의 마음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바라는 뜻으로 국민의 열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찍이 김대중 정부에서 공약한 것을 마침표를 찍었다”라며 “이제는 제대로 공직부패를 근절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견제하면서 제대로 된 권력기관의 모델로 거듭나야 할 책무가 남았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하는 순간이 많았다”며 “드디어 출범을 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 감사의 마음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바라는 뜻으로 국민의 열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서부터 매일 먹지 않을 수 없는 천일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며 “따라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더욱 근본적인 미세플라스틱 발생 방지 대책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지원을 해왔지만, 남은 일에서도 공수처가 내실 있게 잘 갖춰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여기까지 개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해주고 열려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공수처 설립에 대한 국회 청원이 접수된 뒤로부터 25년 만에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됐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70년 넘게 유지돼 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일부 허물어졌다는 것도 출범 그 자체의 의미 아닌가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김 처장의 지휘 아래 인권친화적인 수사기관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모든 수사기관을 21세기 국민의 수사기관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최첨단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 출범의 기초를 마련한 남기명 단장은 “준비단은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진 수사기관의 전범이 되게 하려고 수사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이 실현을 위한 법령 및 각종 제도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근절이란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 모두의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진욱 처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수사를 기존 검찰·경찰이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공수처 출범이 이뤄졌듯, 공수처가 인권친화적인 선진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조그만 초석이나마 놓는 심정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오후 3시에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로 첫 출근하며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취임식에선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견제와 협조하는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수처가 마련된 정부과천청사 건물 뒤편에서는 헌관식이 진행됐다. 윤 위원장을 시작으로 추 장관, 남 단장이 차례로 축하 인사를 전했고 김 처장은 이에 화답했다. 헌관식이 열린지 전 추 장관은 남 단장에게 “고생 많았다”며 격려했고, 남 단장은 “고비 때마다 장관과 위원장이 많이 도와줬다”고 했다. 김 처장은 윤 위원장에게 “여야가 합의해주시고 고맙다”고도 했다.

/뉴시스

도내 기업 수출기반 조성 위한 보험료 지원

전북도-무역보험공 전북지사, 기업별 보험 가입비 연간 300만원·신규는 400만원

전북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가 도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수출보험은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입자가 대금을 늦게 지급해 회사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를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신규 이용업체는 400만 원까지 우대해 지원한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는 ▲단체보험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등 5가지다.

올해 신규사업인 일괄 단체보험은 전북도청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전북에 소재한 연간 수출실적 5백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은 누구나 피보험자가 되는 단체보험이다.

개별기업은 별도의 가입신청 절차 없이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이 발생하면, 최대 5만 달러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plus+보험으로도 불리는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신용장,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 발생시 책임 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계약 시점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해주는 보험으로, 수출실적에 따른 한도를 받은 후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수출용 원자재 구매 및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로, 전북도는 그에 따른 보증료의 50%(15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는 수입자의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서비스로, 수출거래시 상대 수입자에 대한 신용 정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조사 서비스는 업체당 연간 5건 이내(1건당 3.3만원)로 지원한다.

송주섭 도 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총 105개사의 중소기업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총 313억원의 수혜(지급보험금 및 보증금액)를 받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대외거래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자금사정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보험료 지원대상은 전북도에 분사 또는 공장(사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063-276-2360~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개정 이뤄지나

국주영은 도의원, 토론회 열고 “노동자 적용범위 민간부문까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 필요” 거론된 사항 검토해 상반기 중 조례안 상정 예고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더불어민주당, 전주9) 의원은 2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국주영 의원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송주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과 정광수 전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국주영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선 우물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에도 영향을 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도 나타난다”면서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했다.

국주영 의원은 “감정노동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지난 2017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체계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주영 의원은 기존 조례의 적용대상이 공공부문의 노동자로 한정돼

있고, 조례 내용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친편일몰적이며, 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조항보다 노력조항이 많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개정방향으로 국주영 의원은 “노동자의 적용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장하고, 단체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감정노동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광수 센터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까지 명시해야 한다”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센터 설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어, 송주섭 도 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노력과 근로환경개선 등 감정노동에 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을 검토해 상반기 중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도 산하 공공기관 코로나 위기극복 동참

올해도 임대료 인하 적극 전개

전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업체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도는 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 내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임대료 일제 감면을 추진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에 입주한 3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 임대료의 30%에서 50%까지 총 3억5천5백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전북도에서 먼저 발 벗고 동참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맞은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아울러 도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북도의 따뜻한 움직임은 올해도 이어질 예정이다.

도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 기관 내 입주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상할 수 있는 움직임이 도내 전반으로 확산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전국적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바란다”면서 “이제 백신 개발 등으로 터널의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은 힘이 더해진다면 위기 극복의 날도 멀지 않았기에 도에서도 코로나19 극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 보건환경연구원 격려 방문

전북도 최훈 행정부지사는 21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진단 기관인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방역망 점검과 함께, 코로나19와 분투하고 있는 관계자를 격려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법정 감염병 확진자 진단 기관으로 지난해 1월 29일부터 24시간 코로나19 신속진단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 부지사는 검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진단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년째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코로나19 확진자 진단 결과를 신속히 분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확인진단 검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주범 미세플라스틱 대책 마련해야”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21일 “인류의 건강과 자연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서부터 매일 먹지 않을 수 없는 천일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며 “따라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더욱 근본적인 미세플라스틱 발생 방지 대책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서부터 매일 먹지 않을 수 없는 천일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며 “따라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더욱 근본적인 미세플라스틱 발생 방지 대책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오평근 도의원, 오늘 열릴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촉구키로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2)은 22일 열릴 올해 첫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와 돌봄, 택배·배달, 대중교통, 환경미화 등 필수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오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북도는 도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 정책 및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북도는 도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 정책 및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기에 놓여 있어, 개별 필수노동자들에게 대한 선심성 지원이 아닌 공적영역에서 접근해 지원책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캐나다에서는 최대 16주간 140여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영국은 코로나 19 무료 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등 24개 자치단체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북도는 도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 정책 및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